불법 골재채취 뒤엔 허술한 감독기관 있었다

광주 서구 유촌동 골재생산업체 탈법 현장 가보니

골재채취 허가권 매각 사실 적발돼 3개월간 영업정지 남편 명의 회사 설립 작업 계속…사용기간 1년 연장도 허가 받지 않은 땅 마구잡이 파헤쳐 버젓이 채취 물의

법망을 피해 영업하는 골재 채취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감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대표가 가족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 버젓이 영업하는데도 마땅히 규제할 방안도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하다.

◇ '법망'은 허술, '부실한' 자치단체 관리=11일 광주 서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C골재 채취업체는 지난해 불법 행위가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자 가족 중 다른 인물을 내세워 신규 허가를 받은 뒤 광주

시 서구 유촌동 38-1번지 일대(8610㎡)에 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전북 김제에서 골재 채취 허가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적발, 관할 자치단체인 북구청에 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그러나 곧바로 대표자 명의를 바꾼 뒤 버젓이 골재 생산을 이어갔다. 부인 명의로 된 업체 대신, 남편이 대표자로 나서 신규 업체를 만든 것으로, 서류상 변경 절차 외에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바 뀌지 않았지만 '법망'을 피하면서 보란 듯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업체는 허가를 받은 뒤에도 '극락강에서 나온 토사를 유촌동 부지로 옮겨와 선별 작업을 거쳐 골재를 생산한다'는 신고 내용과 달리, 유촌동 부지 내 마사토를 파헤쳐 골재를 생산하는가 하면, 허가받은 수준(5m 깊이)보다 훨씬 깊게 파헤쳐 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는 신고 당시 약속했던 사업장명, 위치, 작업기간, 시행사 등 안내 표지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질질 끈 행정처분, 업체는 사용기간 1년 연장=해당 골재 채취업체는 애초 서구청에 지난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11월 31일까지 골재를 생산하겠다며신고한 뒤 오는 11월 말까지 1년 연장 신청을 내 골재 채취 승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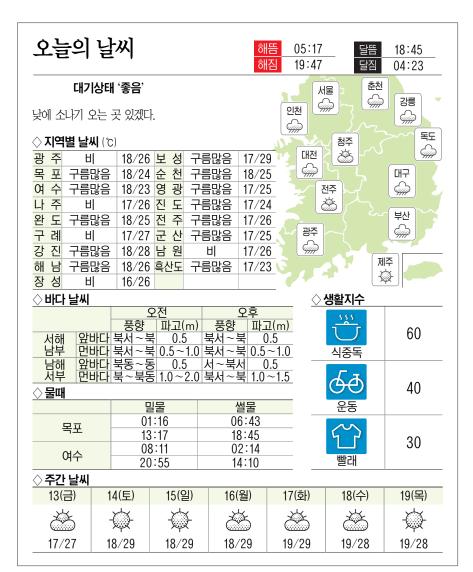
북구청은 해당 업체가 지난 8월 전북 김 제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을 다른 사업자에 게 45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골재채취 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된 뒤 3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해 11월 20일 행정처분 예비조치에 들어간 데 이어 12월 5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북구청의 행정처분이 5일만 빨랐다면 서구청의 연장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점에 서 자치단체의 '근무 태만'이 불법 채취업 자의 영업 행위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북구청은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감경 사유 없이 3개월로 줄여 처분,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데시간이 걸렸을 뿐 특정 업체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니다"면서 "영업정지 기간을 축소한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달 광주시 서구 유촌동 C산업이 운영하는 골재생산 작업장에서 포클레인이 토사를 퍼서 덤프트럭에 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술김에 경찰관 욕했다가… 손해배상금 100만원 물게 돼

광주·전남 첫 판결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게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건설직 노동자인 김모(50·광양시)씨는 지난 3월 17일 밤 11시30분께 보성군 벌교 읍 S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 지자 소주를 추가 주문했다.

주인이 "문 닫을 시간이 됐다"며 주문을 받지 않자, 김씨는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주인 김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박모(48) 경위 등 2명이 김씨를

제지했다. 하지만 김씨는 박 경위 등에게 "야 ×××야. 네 마음대로 해라. ×××야."라며 30분간 폭언을 퍼부었다. 경찰은 김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초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청구한 모욕혐의 위자료 금액 등을 참고, 순천지원 광양시법 원에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광주·전남에서 경찰이 취객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다. 그동안 경찰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취객 등 민원인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 해왔다. 보성경찰 관계자는 "향후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모욕 등을 당했을 땐 무 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민사소송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은 불우이 웃을 돕는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r는데 들 것 이다고 될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군청 비서실 뭉칫돈' 전방위 수사

경찰, 비서실장 등 관련자 소환 대질신문 등 벌여

'무안군청 비서실 뭉칫돈' 사건〈광주 일보 5월 30일자 6면〉을 수사 중인 전 남경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

경찰은 군 비서실장 A씨의 사무실 등 지에서 발견된 뭉칫돈이 누구 소유의 것 인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집 중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 돈이 경찰·정 당인 등에게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지들을 소된 오차 중이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와 김철주 무안 군수의 아내가 돈의 출처에 대해 서로 상 반된 진술을 해 양측을 불러 대질심문을 벌였다. 양측은 경찰에서 "내 돈이 아니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누군가로부터 1000만 원의 돈을 받은 뒤 무안경찰 직원과 새 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직원 등에게 현 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PC의 하드디스크가 지워진 정황을 포착, 파일 복원작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군 소속 정보담당 직원과 군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KT 직원 등을 불러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안군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서실장 A씨를 직위해제 했다.

비서실장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직 경찰간부·조폭 낀 대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적발

해양수산부 😵 수협

전직 경찰간부와 조직폭력배 등이 낀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1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전직 경찰관 A(38)씨 등 7명을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건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범인 포

항 폭력조직 행동대원 B(37)씨에 대해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하는 등 5명에 대해 기소중지했다. 기소된 7 명에 대해서는 모두 4억원가량을 추징 구형하고 추징보전 청구도 했다.

적발된 이들은 사이트 운영자, 자금 세탁자, 각 지역 총판 또는 매장 운영자 등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여러분의 소중한 터전과 수산물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대상품목

넙치 • 전복 • 조피볼락 • 참돔 • 돌돔 • 감성돔 • 농어 쥐치 • 기타볼락 • 숭어 • 굴 • 김 • 멍게 • 뱀장어 • 미역

2014년 출시 예정품목 강도다리 / 다시미 / 홍합

* 일부 시범사업 품목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넙치, 전복,*해상가두리어류, 뱀장어는 7월~9월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해상가두리어류 :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보상하는 재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자연재해 원인 전기적장치 위험

* 양식 품목에 따라 보상하는 재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입문의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4119